

4.7 재보궐선거와 다른 민주주의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1. 서언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4명의 소수정당과 무소속 여성 후보가 얻은 득표는 2%를 넘지 못했다. 여성의당 김진아 0.68%, 기본소득당 신지혜 0.48%, 무소속 신지예 0.37%, 진보당 송명숙 0.25% 총 1.78%이다. 1.78%라는 숫자가 주는 무게감은 지극히 가볍다. 그러나 그것이 던지는 의미의 파장은 작지 않다. 1.78%밖에 되지 않는 4인의 여성 후보의 득표율 뒤에는 새로운 정치적 주체의 부상과 선택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4.7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 결과는 “20대 청년 유권자들의 투표봉기”라고 요약해도 과언이 아니다. 20대 청년 남성들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에게 물표를 주다시피 하여 그들의 분노를 표출했고, 20대 청년 여성들은 소수정당에 대한 소신투표로 그들의 저항을 가시화했다. 20대 청년세대는 항상 기성세대의 정치적 올바름의 기준에서 벗어나

있었다.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이고 정치에 대해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냉소적인 집단이라고 비판받아 왔다. 그런 세대들이 가장 도발적인 방식으로 집단적 의사를 표출했다. 무엇이 이런 선택을 하게 했을까? 이를 통해 무엇을 전하고 싶었을까? 아마도 특권과 반칙을 정당화하는 내로남불의 기제로 전략해버린 기성세대의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강한 경고가 아니었을까 싶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4.7 재보궐선거 특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참여했던 소수정당과 4명의 여성후보, 그리고 15.1%의 20대 여성들의 선택이 갖는 정치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정치적 주체로 부상한 20대 여성들의 지속 가능한 정치세력화를 위한 과제를 함께 고민해 본다.

2. 소수정당과 여성후보: 다른 진보를 향한 전진

이번 4.7 보궐선거에는 8개의 소수정당이 참여했다. 기본소득당, 민생당, 여성의당, 국가혁명당, 진보당, 미래당, 신자유민주연합, 자유민주당 등 8개의 정당이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후보를 냈다. 미래당, 민생당, 진보당 등 3개 정당은 서울과 부산 모두에서 후보를 냈고, 나머지 5개 정당은 한 곳에만 후보를 냈다. 부산에서 후보를 낸 자유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정당은 서울 한 곳에만 시장 후보를 냈다.

소수정당은 다양한 모습으로 선거마다 존재해 왔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는 민중당, 대한애국당, 녹색당, 코리아, 우리미래, 친박연대 등 8개 이상의 정당이,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는 통합진보당, 공화당, 노동당, 녹색당, 새정치당, 한나라당 등 6개 정당이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는 국민참여당, 국제녹색당, 친박연대, 평화민주당 등 8개 이상의 정당이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를 냈다. 국회의원선거도 예외가 아니었다. 지난 제21대 총선에는 32개의 소수정당이 참여했고, 제20대 총선에는 17개의 소수정당이 참여했다. 소수정당이라 해서 모두 원외정당은 아니다. 정의당이나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과 같이 10석 미만의 원내 소수정당도 있다.

그렇다면 기존의 소수정당과 4.7 보궐선거(엄밀히 말하면 제21대 총선에 참여했던)에 나온 소수정당 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첫째, 기존의 소수정당들은 기성정당의 공천과정에서 탈락한 정치인들의 연대나 분당의 형태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이념이나 가치기반의 정당이라기보다는 공천을 위

한 이익공동체의 성격을 띤다. 이에 반해 4.7 재보궐선거에 나온 소수정당들은 의제 중심의 정당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노동의제 중심의 민노당(2004)과 환경의제 중심의 녹색당(2012)이 제도권 정치(민노당)에 진입한 이후 10여년 만에 기본소득, 여성, 청년, 소수자 문제, 소상공인 문제 등 기성정당에서 대변되지 못했던 다양한 의제 중심의 정당들이 창당되었고, 이 점에서 기성 소수정당과는 다른 차별성을 갖는다. 의제 중심 소수정당의 창당은 녹색당을 제외하고는 제21대 총선부터 본격화되었고 4.7 재보궐선거에 참여한 정당들은 그 연장선에 있다. 둘째, 4.7 재보궐선거에 참여한 소수정당들을 대표하여 여성후보들이 대거 출마했다. 8개 소수정당 중 서울 시장 후보로 여성이 출마한 정당은 기본소득당, 여성의당, 진보당 등 3개 정당으로 3분의 1을 넘었다. 이는 이번 서울 및 부산시장의 보궐선거가 권력형 성비위 사건으로 야기되었다는 사실에서 전략적인 측면에서 고려된 부분도 적지 않을 것이다. 셋째, 서울시장에 출마한 소수정당의 후보들은 페미니스트를 표방하거나 성평등 아젠다를 핵심적으로 제시한 정당들이 많았다.

4명의 여성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각 정당의 중심의제와 성평등정책을 대등하게 제시하고 있다. 기본소득당의 신지혜 후보는 “7대 기본소득 서울”을 통해 성평등, 공공주거, 탄소중립, 데이터주권, 모두돌봄, 안전도시, 동물공존을 원칙으로 공약을 제시했다. 신 후보는 ‘기본소득 서울’을 캐치프레이즈로 △성평등 정책으로 취임 직후 1호 사업에 공공부문 성폭력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반성폭력 업무지침 마련, 5급 이상 공무원 및 투자출연기관 관리직에 여성 50% 할당, 불법촬영물 영상 삭제 지원 조례 제정을 약속했다. △돌봄 정책

으로는 모든 자치구에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종합재가센터, 데이케어 센터,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설치 △부동산 정책에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50%에서 75%까지 확대 △생태 정책으로는 서울시 청사부터 전면적 그린 리모델링을 통한 제로 에너지 건축 1등급 달성 등을 약속했다.

여성의당 김진아 후보는 '여혼살'(여자 혼자도 살기 좋은 서울)이라는 슬로건 하에 모든 공약을 여성 관련정책으로 제시했다. △성평등 정책으로 서울시 소재 공기업 및 대기업, 중견기업 임원에 50% 여성 할당 △부동산 정책으로는 SH 서울도시주택공사 공공주택분양의 50%를 여성세대주 가구(1인가구 우선)에게 의무 할당할 것을 약속했다. △청년 정책에는 서울시 소재 공기업 및 50인 이상 사기업 채용 시 서류 성별 블라인드 제도와 함께 면접 시 면접관 성비 5:5 서울시 조례 제정 △돌봄 정책에서는 여성 노인이 각 구·동별 경로당 혹은 보건소에서 재활 및 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제시했다.

진보당의 송명숙 후보는 △성평등 정책으로는 서울시청 내 독립적 성폭력 전담위원회 구성,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성평등승진목표제 제언 △돌봄 정책으로는 서울형 육아휴직, 서울형 돌봄휴가제, 요양보육 장애인 돌봄시설 설립 △부동산 정책으로 모든 주거 임대료 인상률 동결, 서울시 운영 건물 임대료 50% 이하 삭감 △청년정책에는 양도, 증여, 매매가 불가한 집 사용권 제도를 도입하고 청년이직 급여를 위한 서울시 조례 제정 △생태 정책으로는 탄소 배출 제로 구역 설정, 탈석탄 가치반영 금고기준 조례 개정 등을 약속했다.

무소속의 신지예 후보는 무소속이지만 팀서울(Team Seoul) 서울시장-부시장 러닝메이트 제도로 선거에 출마했다. 한 명의 시장 후보와 각자의

전문성을 띤 여섯 명의 부시장 후보와 함께 했다. 신 후보는 △성평등 정책에서 성폭력과 혐오범죄에 무관용 원칙, 서울시민인권헌장 발표 및 동반자 등록 조례 제정, 서울시 임금격차해소 및 여남동수제 도입 △돌봄 정책으로는 돌봄노동에 대한 시민노동 보상제도 도입 △부동산 정책에는 지역별 임대료, 다주택 민간임대사업자 공시 도입, 사회주택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 정책 확대 △생태 정책으로는 공공/민간 건축물 신재생에너지 기준 상향 및 에너지 총량제 실효성 강화 △문화·예술 정책으로는 공공서점, 공방 등 민간 시설과 도서관,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의 통합적인 운영 등을 약속했다.

무엇보다도 이들이 제시한 공약들은 그동안 기성 정당들의 시계와 관심 밖에 있었던 청년 여성, 소수자, 소상공인 등의 대상들을 포섭하였고 그들의 미래를 위한 대안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공약과 지향성은 기존의 보수-진보의 프레임으로 설명할 수 없다. 이들은 기존의 보수-진보의 프레임에서 벗어난 다른 정치적 주체들이며 이들이 말하는 진보는 기성세대의 진보와는 다른 진보와 다른 민주주의를 내포하고 있다.

진보는 흐르는 물과 같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 항상 고임이 없이 시대의 변화에 반응하며, 흘러가야 한다. 이번 4.7 재보궐선거에서의 청년들의 선택은 바로 진보는 새로운 정치적 주체들의 다른 욕구에 의해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환기시켜 준다. 기성세대와는 전혀 다른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세대를 대변하고자 희망하는 정당이라면 그들이 표방하는 진보는 기성세대의 진보와 다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여성주의를 표방하는 소수정당과 여성 후보의 등장은 페미니즘 리부팅(rebooting)과 강남역 살인사

건과 미투운동, 해화역 시위, 텔레그램번방 사건 등 일련의 사회적 변화에 대한 청년여성세대의 대응이고 정치적 선택이다. 따라서 권력형 성비위 사건에 의해 실시된 4.7 재보궐선거에 국한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더군다나 이들 청년 여성들이 다양한 정치적 결사체인 정당으로 세력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행보는 2022년에 있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지속될 것이다.

3. 청년여성의 선택: 세대정치를 가로지르는 젠더정치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2030 청년세대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면서부터 세대가 중요한 투표결정요인으로 부상하였다. 연구자들은 세대변수가 지역주의를 대체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내놓았다. 이처럼 한국정치에서 세대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단지 연령에 따른 투표행태의 차이가 확인되기 때문만은 아니다. 투표행태만이 아니라 이념성향과 정책선호에서 있어서도 세대 간의 차이가 확인되기 때문이다. 어찌보면 이는 너무나 당연한 현상일는지 모른다. 한국전쟁, 압축적인 경제성장과 5.18 민주항쟁, 그리고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각 세대의 의식 세계에는 서로 다른 정치적 경험들이 축적되었기 때문이다.

기성세대의 이념형성에는 한국전쟁과 분단이라는 역사적 경험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고, 현재의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적 성향은 기성세대의 관점이 반영된 북한에 대한 인식과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나누어진다. 반면 전후세대 특히 민주화 이후의 2030년 청년세대들의 이념형성에는 불평등

이나 복지문제 등 성장과 분배에 대한 입장이 중요한 변인으로 작동하고 있다(윤성이·이민규, 2014). 모든 세대에서 대북정책이 중요한 이념형성요인이지만, 복지와 증세 등 경제적 차원에 기반한 이념 차이는 2030 세대의 유권자들 사이에서만 발견되고 있다(강원택·성예진, 2018).

2030 청년세대들은 성별을 떠나 기성세대와는 다른 진보를 구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근거한 다른 정치적 선택들을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기존의 보수-진보의 이념적 성향 프레임으로 청년세대의 선택을 “정치적 보수화”로 재단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청년세대의 오세훈 후보에 대한 압도적 지지는 그들의 입장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에 따른 성장기회의 훼손과 LH 등 기회 및 자원 분배에서의 공정성 침해에 대한 정당한 분노의 표출이며, 합리적 판단에 따른 진보적 실천인 셈이다.

역사적 경험의 차이, 이에 기반한 이념형성의 차이 등에 의해서 투표행태의 세대 간 차이가 나타난다. 아래의 <표 1>에서 이러한 세대 간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청년세대일수록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가 높은 반면 50대 이상은 보수정당에 대한 지지가 높다. 이우진의 연구(2014)에 따르면 2007년 대통령선거부터 2008년 총선, 2012년 총선, 2012년 대통령선거까지 2030 세대의 보수정당에 대한 지지도는 각각 61%와 57%에서 27%와 38%로 20~30% 감소한 반면 5060 이상 세대는 60~70% 이상의 지지를 꾸준히 유지하였다.

〈표 1〉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방송3사 출구조사)

(단위: %)

구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시장 보궐선거		
정당명	더불어 민주당	미래 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기타정당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힘	기타정당
전체								
18세~20대	56.4	32.0	1.9	2.9	6.8	34.1	55.3	10.6
30대	61.1	29.7	1.5	2.3	5.4	38.7	56.5	4.8
40대	64.5	26.9	1.5	2.3	4.9	49.3	48.3	2.4
50대	49.1	41.9	1.7	1.7	5.6	42.4	55.8	1.8
60세 이상	32.7	59.6	1.7	0.7	5.3	27.2	72.0	0.8
남성								
18세~20대	47.7	40.5	2.0	2.5	7.3	22.2	72.6	5.2
30대	57.8	33.0	1.5	2.1	5.6	32.6	63.6	3.8
40대	65.0	26.5	1.5	2.1	5.0	51.3	45.8	2.9
50대	50.8	40.1	1.7	1.7	5.7	45.1	52.4	2.5
60세 이상	31.8	59.7	2.0	0.7	5.8	28.3	70.2	1.5
여성								
18세~20대	63.6	25.1	1.7	3.3	6.3	44.0	40.9	15.1
30대	64.3	26.5	1.6	2.4	5.2	43.7	50.6	5.7
40대	64.2	27.3	1.4	2.4	4.7	47.8	50.2	2.0
50대	47.5	43.8	1.6	1.7	5.5	40.3	58.5	1.2
60세 이상	33.5	59.5	1.4	0.6	5.0	26.4	73.3	0.3

※ KBS 등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

동일 젠더 내에서도 비슷한 세대 간 차이가 나타난다. 그뿐만 아니라 세대 내 젠더 간의 차이도 확인할 수 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에서 보듯이 같은 20대이어도 정당지지도에 있어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가 여성들은 44%인 데 반해 남성들은 절반 수준인 22.2%로 나타났고 20대를 제외한 다른 연령대 중 가장 큰 차이가 났던 30대(11.1%)보다도 2배나 많았다. 이는 제21대 총선에서도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20대 남성들이 20대 여성보다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15%정도 낮았다. 그 차이는 다른 연령대 중 가장 큰 차이를 보였던 30대의 젠더 간 차이(7%)보다도 2배나 많았다.

특히 이번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세대 내 젠더 간 차이를 확연하게 보여주었던 세대는 20대 여성들이었다. 차기 대통령 선거를 11개월 앞둔 시점에 실시된 4.7 보궐선거는 보궐선거 발생의 책임 문제도, 권력형 성범죄 재발방지와 피해자보호를 위한 대책에 대한 논쟁도 모두 사라진 채 오로지 양대 거대정당의 네거티브 선거운동만 난무했던 최악의 선거이었다. 이러한 최악의 선거를 특별한 선거로 만든 세대가 바로 20대 여성들이었다. 20대 여성들의 기타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15.1%로 20대 남성(5.2%)에 비해 3배가량 높았다. 이는 제21대 총선의 기타정당에 대한 지지도와도 달랐다. 제21대 총선에서의 기타정당에 대한 지지도는 근소한 차이

기는 했지만 남성들이 더 높았다.

20대 여성들은 기타정당에 대한 투표가 사표가 될 줄 알면서도 차악이 아닌 소신투표를 선택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차원의 설명이 가능하다. 그동안 권력형 성범죄, 스토킹범죄, 디지털 성폭력, 채용불평등 등 각종 심각한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한 경고의 의미이다.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에는 익명의 2030 여성 30만명(해화역시위 혹은 불편한 용기 시위)이 참여했고 텔레그램 n번방사건 해결을 위한 국민청원에도 30만명이 넘는 2030 여성들이 참여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의 대응은 소극적이었다. 또 다른 이유는 바로 20대 여성들이 직면한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들고 나온 소수정당과 여성후보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4인의 여성후보들은 여성안전과 성평등을 중심으로 하는 공약들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페미니스트 후보임을 직간접적으로 표방하였다.

특히 2020년에 창당한 여성의당은 여성의제정당이라는 정체성을 표방하고 여성의제만을 중심으로 한 공약으로 제21대 총선에 이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도 참여했다. 여성의당 김진아 후보는 “여성이 혼자도 살기 좋은 서울”이라는 슬로건 하에 20대 여성 맞춤형 공약들을 약속했다. 즉, 여성주의와 여성의제를 표방하는 여성후보와 정당의 존재는 20대 여성들의 정치적 의사를 결집시키는 데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가 15.1%로 나타난 것이다. 결과적으로 소수정당과 여성후보의 존재가 20대 여성들로 하여금 거리의 정치에서 제도권 정치로의 전략수정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4. 평등한 대의제를 향한 과제

5천 2백만 인구 중에서 2030 세대는 1천 3백만 명 정도이다. 20세 이상 인구 4천 3백만명 중 32%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들 청년세대의 정치적 대표성은 제21대 국회의 경우 13명인 4.3%에 불과하다. 투표권자의 30% 이상을 차지하면서도 청년세대의 가치와 의견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은 5%를 넘지 않는다. 여성의당을 비롯한 녹색당, 미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많은 소수정당에는 다양한 가치와 이념을 지지하는 청년세대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기성정당에 대한 불신과 다른 가치에 대한 지향성은 청년세대들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로 이어졌다. 이제 관건은 이렇게 만들어진 소수정당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 핵심은 소수정당 중심의 연대 정치를 실현하는 길일 것이다.

첫째,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한 소수정당 간 선거연대를 구축하는 일이다. 선거연대의 수준은 협력 이상의 수준이어야 한다. 다수의 소수정당이 참여하는 선거운동본부를 구성하여, 정당한 출마 선거구를 조정하고, 공동선거운동 전략 등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통합이나 합당이 아니라 각자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선거승리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의 들러리나 대리전을 수행하는 곳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민생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풀뿌리 단위의 선거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현행 기초의회 의원 선거는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로 이루어지며, 비례대표 의원은 의원정수의 100분의 10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지역주민의 다양한 이해를 의사결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기

초의회 구성에 있어서의 다양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기초의회 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선거를 폐지하고 비례대표 선거로만 기초의회를 구성하도록 해야 한다. 돈과 조직이 없어도 누구든 착실한 정당활동만으로도 지역주민의 대표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이와 더불어 정당 이외에도 기초의회 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낼 수 있는 정치단체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정치단체는 지역사회의 일정 활동요건을 갖춘 시민단체들만이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정치단체 활동기간은 자치구 및 시의회 의원선거의 경우는 선거개시일 전 9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군의회 의원선거의 경우는 선거개시일 전 6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로 한정한다. 대부분의 소수정당은 전국 240여개의 기초자치단체 단위까지 정당조직을 구성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소수정당은 지역시민 단체활동을 기반으로 한 한시적 정치단체와의 연합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수정당의 영향력 확대에 지대한 기여를 할 것이다.

넷째, 남녀의 동등한 대표성 확립을 위한 동수정치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여성대표성에 대한 패러다임은 크리티컬 매스(critical mass, 임계질량 30%)를 넘어 동수(parity)로 전환하였다. 이는 단순히 30%에서 50%로의 수의 양적 증가를 의미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동수(parity, 동등, 균형) 즉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대표성은 완전하게 평등한 대의민주주의를 위한 기본원칙이라는 인식으로의 전환을 요

구한다. 여성위원의 비율이 40%를 넘는 국가가 191개 국가 중 23개, 30%가 넘는 국가는 53개나 된다. 남녀 동수/동등대표인 parity는 이제 국제사회의 규범으로 평등한 대의제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원칙적이고 도전적인 규범이 되었다. 남녀 동수/동등 대표성의 실현은 여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평등한 대의제를 실현하기 위한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것이다. 변화하는 규범에 맞춰 동수정치운동을 추진하여 의식개혁에서부터 헌법개정에 이르기까지의 제도 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

지금 우리의 민주주의는 보다 평등한 대의제를 향한 전환기의 도정에서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탈과 균열이 나타나고 그동안 대표되지 못했던 다른 지향성을 가진 주체들이 정치의 장에 등장하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필연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평등한 대의’의 원칙은 끊임없이 지금 우리의 민주주의는 누구의 민주주의인가를 묻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평등의 이름으로 기성정치에서 배제된 자들, 뭍이 없는 자들 그리고 자격을 부여받지 못한 자들을 지속적으로 호명하며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존재했으나 소외되었던 그러나 미래의 주체가 될 민주주의자들에 의해서 재발명되어야 한다. 세대교체와 동수/동등 참여에서 소수정당의 지속가능성을 찾아야 하는 이유이다.

• 참고문헌 •

- 강우진(2020), 「무엇이 기회균등 인식을 결정하는가?」, 『한국정당학회보』 제19권 제2호(통권47호). 한국정당학회. pp. 37-61.
- 강원택·성예진(2018),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 이념과 세대: 보수성향 유권자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제27권 1호.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pp. 205-240.
- 김은주·박진경·권병진(2017), 「여성대표성확대를 위한 정치관계법개정」, 한국여성정책.

- 김은주·김민정·최태욱·하종범(2018), 「남녀동수법 제정의 필요성과 그 실현방안」, 한국여성의정.
- 박선경(2020), 「젠더내 세대격차인가, 세대 내 젠더격차인가?: 청년여성의 자기평가이념과 정책태도 분석」, 『한국정당학회보』 제19권 제2호(통권47호). 한국정당학회, pp. 5-35.
- 윤성이·이민규(2014), 「한국사회 이념갈등의 세대 간 특성비교」, 『21세기정치학회보』 제24집 제3호. 21세기 정치학회, pp. 271-292.
- 이우진(2014), 「성과 세대의 정치경제」, 『재정학연구』 제7권 제4호(통권 제83호), pp. 1-40.